

#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 3 10



**I.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

**II.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III.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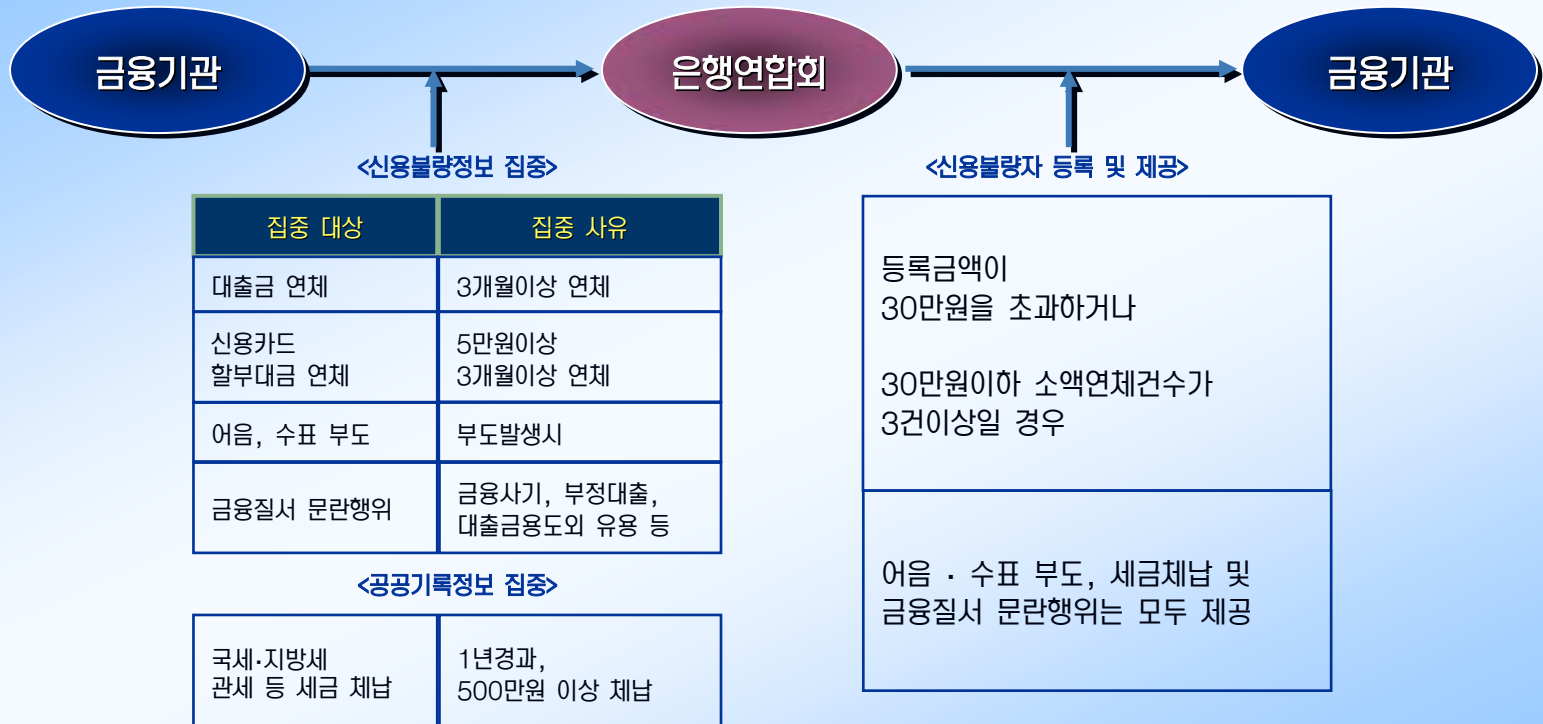




## **I.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

■ 우리나라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정의

➤ 등록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정보를 집중·관리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



- 연체금 등을 변제할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해제
- 다만, 신용불량자에서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도  
등록 금액·기간 등에 따라 최장 2년(단, 금융질서 문란자는 5년)까지 신용불량기록을 보존·관리
- \* 신용불량기록 해제후 기록보존중인 자는 신용불량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기록보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불량등록후 90일 이내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li> <li>· 대출금 연체(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 연체(200만원 이하)를 해소한 경우</li> <li>·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li> </ul>	없음
· 신용불량등록후 90일 ~ 1년이내에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불량등록후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li> <li>• 부도거래처</li> </ul>	2년
• 금융사기, 서류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요청으로 해제한 경우	5년
• 연체금 변제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금융질서 문란자는 5년)

■ 00년 이전 : 각 금융업권별 규약에서 각각 신용불량등록 및 제재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

- 84~91년 : 황색, 적색, 신용카드 불량거래자
- 92~96년 :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
- 97~00년 :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주의 거래처	금융거래 신중	대출금 연체	1,500만원미만, 6개월이상 연체
		카드 연체	5~50만원 : 6개월이상 연체 50~500만원 : 3개월 이상 연체
황색 거래처	금융거래 신중 + 기존 여신관리 강화	대출금 연체	1,50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카드 연체	50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적색 거래처	금융거래 정지	대출금 연체	1,500만원이상, 6개월이상 연체
		카드 연체	500만원이상 6개월이상 연체

■ 01.1~02.6월 : 각 금융업권별 규약을 ‘신용정보관리규약’으로 통합

주의·황색·적색 등의 분류를 신용불량자 개념으로 단일화(각 금융업권별 기준은 상이)

1개 범주(신용불량자)로 통합, 금융거래제재 수준은 금융기관별 자율 결정	대출금 연체	1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신용카드 연체	5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

■ 02.7월이후 현재 : 금융업권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대출금, 카드 등에 관계없이 3개월이상, 30만원 초과 연체시(3개월, 30만원 이하 연체 3건 이상도 포함) 등록

■ 외국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규정·관리하고 있지 않음

-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에서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 연체정보를 일반 여신정보와 함께 신용거래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며,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의 하나로 활용
-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

<신용불량자 제도 관련 외국의 운용현황>

	신용불량자 제도 및 법적 근거	연체 정보 등의 관리
한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용불량자 제도를 운용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를 등록·관리, 제공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서도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 제공
미국	신용불량자 제도 없음	3대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일본	신용불량자 제도 없음	업권별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보를 집중·제공하고, 업권간에도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영국	신용불량자 제도 없음	종합집중기관은 없으며, 민간신용정보회사에서 정보 수집·제공



## **II.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 1.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
- 2. 신용불량자 실태 분석**



# 1. 신용불량자 증가 추이

## II.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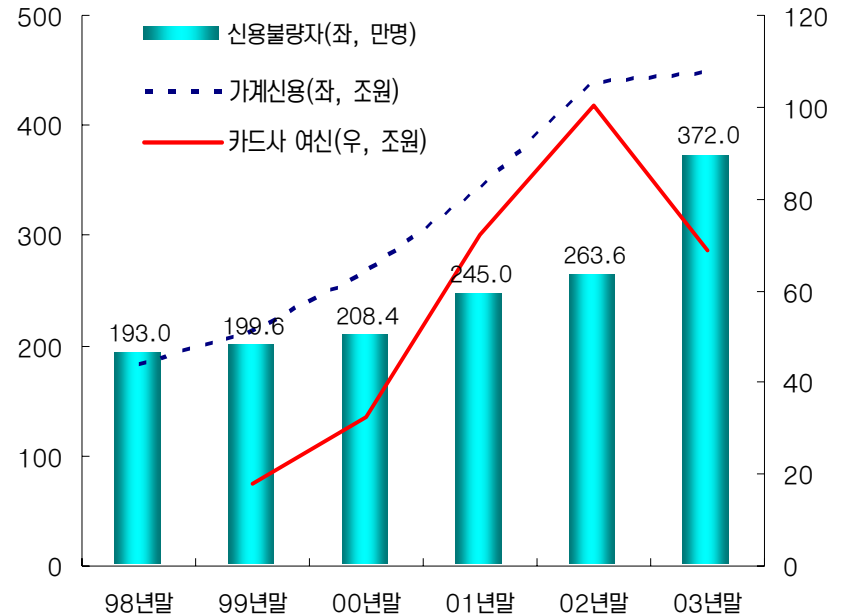
■ 경제위기직후 경기 침체로 신용불량자가 97년말 143만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상승한 후, 00년까지 동 수준 유지

\* 99~00년중의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규모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경제구조가 최소한 220~2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KDI)

■ 01년중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245만명으로 증가한 후, 02년말 260만명 수준으로 확대

■ 03년중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108만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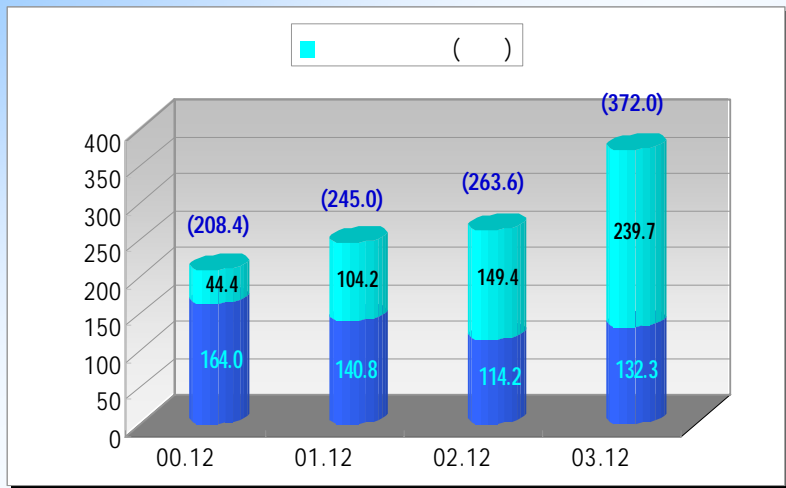
※ 108만명중 90만명이 신용카드 연체(3개월이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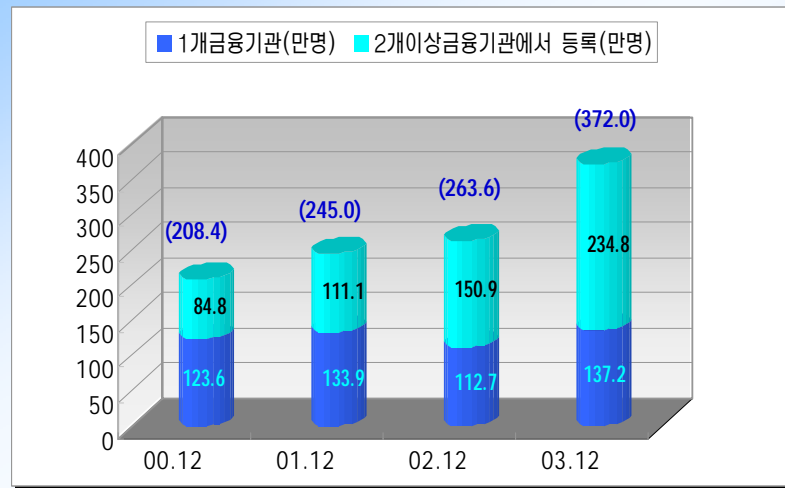
(단위 : 만명, 조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신용불량자 (증감, 만명)	193.0 (50.1)	199.6 (6.6)	208.4 (8.8)	245.0 (36.6)	263.6 (18.6)	372.0 (108.4)
가계신용 (증감, 조원)	183.6 (-27.9)	214.0 (30.4)	266.9 (52.9)	341.7 (74.8)	439.1 (97.4)	447.6 (8.5)
카드사 여신 (증감, 조원)	- (-)	18.1 (-)	32.3 (14.2)	72.0 (39.7)	100.3 (28.3)	68.6 (-31.7)

##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크게 증가



## 다중 신용불량자가 상대적으로 증가



##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

(단위 : 만명)

	00.12말	01.12말	02.12말	03.12말	(구성비,%)
10대	0.27	1.2	0.65	0.45	(0.1)
20대	26.7	40.8	48.8	73.1	(19.7)
30대	65.5	70.4	75.9	113.3	(30.4)
40대 이상	115.9	132.6	138.2	185.2	(49.8)
계	208.4	245.0	263.6	372.0	(100)

## 1,000만원미만 신용불량자가 47%를 차지

(단위 : 만명)

	00.12말	01.12말	02.12말	03.12말	(구성비,%)
500만원미만	91.5	106.3	90.8	119.3	(32.1)
500~1,000만원	29.9	36.3	43.5	57.1	(15.3)
1,000~2,000만원	29.6	36.0	44.4	64.0	(17.2)
2,000만원이상	57.4	66.4	84.9	131.6	(35.4)
계	208.4	245.0	263.6	372.0	(100)

### 신용불량자에 대한 심층 전화 인터뷰

- ▶ 조사대상 : 총 3,919명(국민은행,삼성카드,KAMCO 각 1,000명,신용회복위원회 919명)
- ▶ 표본추출방법 및 오차범위 : 성/연령별 비례할당 무작위 표본추출법,  $\pm 1.57\%$ (95%신뢰수준)
- ▶ 조사기간 : 04.1.29 ~ 2.26
- ▶ 조사기관 : Synovate(영국계 경제조사 전문기관)
- ▶ 조사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 정책반영에 대한 기대심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 있음
  - 부채는 과대하게, 소득은 과소하게 응답했을 가능성
  - 채무재조정을 희망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
  -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함에 따라 조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에 한계

### 금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실태 설문조사

- ▶ 조사대상 : 총 1,510명(금융기관직원 970명, 채권추심회사직원 500명, 신용회복위원회 40명)
- \*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을 통해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
- ▶ 조사기간 : 04.2.16 ~ 2.26
- ▶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

### 신용불량자의 고통·불이익 실태조사

- ▶ 조사대상 : 금감원 민원 제기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신청자 등을 통해 파악
- ▶ 조사기간 : 04.2.16 ~ 2.26
- ▶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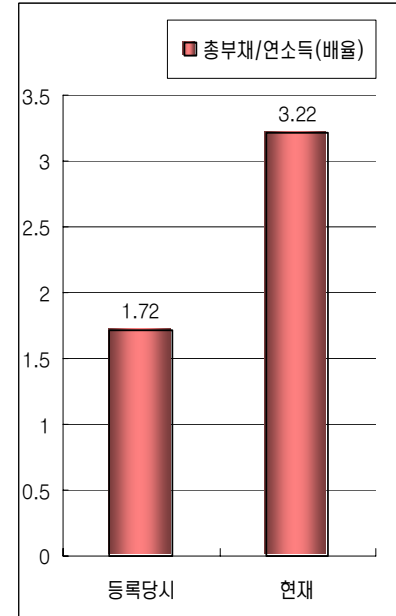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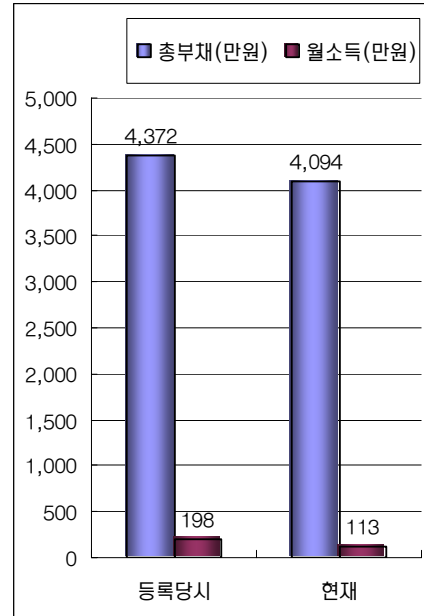
## ■ 신용불량자의 부채·소득·직업 변화

▶ 1인당 부채규모는 등록 당시 4,372만원에서 4,094만원(등록 당시의 94%)으로 소폭 감소

▶ 월평균 소득은 등록 당시 198만원에서 113만원(등록 당시의 57%)으로 급감

\* 연소득 대비 총부채는 등록당시 1.72배에서 3.22배로 크게 증가

▶ 직업별로는 자영업, 정규직이 감소하고, 임시직 및 무직자가 증가하는 등 직업 안정성 약화



	등록시점(a)	현재(b)	비교(b/a)
총부채(평균)	4,372만원	4,094만원	94% 수준
월소득(평균)	198만원	113만원	57% 수준
총부채/연소득	1.72배	3.22배	-
직업	자영업 43% 정규직 31% 임시직 13% 주부 6% 학생 3% 무직 4%	자영업 21% 정규직 29% 임시직 27% 주부 7% 학생 1% 무직 15%	- 자영업, 정규직 감소 - 임시직, 무직 증가

## 연체대출금 사용처

- ▶ 생활비(47%), 대출금 상환 또는 카드 돌려막기(45%), 사업자금(38%) 등에 사용

[복수응답, 단위:%]

전체 (N=3919)



## 신용불량자가 된 주 원인

- ▶ 카드 돌려막기 불가능(50%), 사업실패(37%), 실직(24%) 등이 주 원인이라고 응답

[복수응답, 단위:%]

전체 (N=3919)



## ■ 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기관 이용 경험

- ▶ 전체 신용불량자의 29%가 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회사 대출 또는 사채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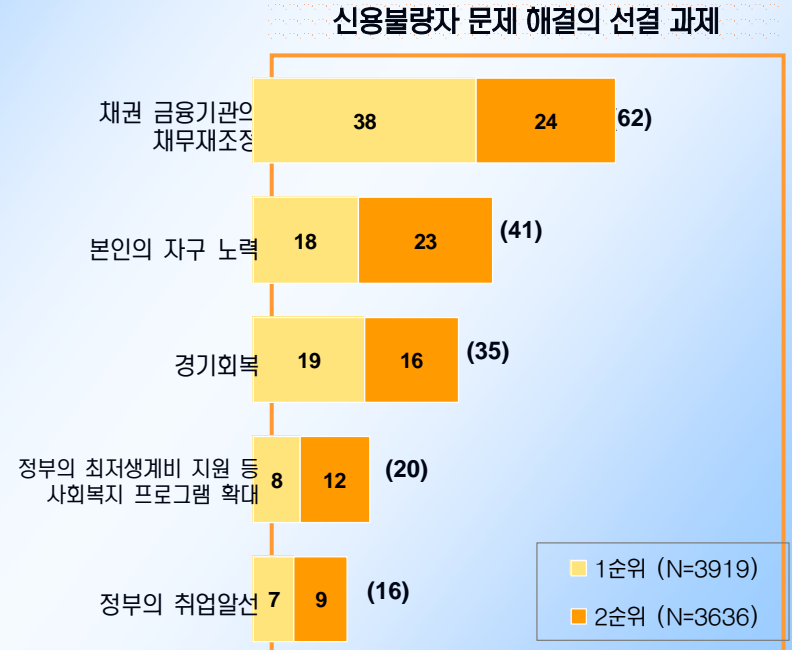
[복수응답, 단위:%]



##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

- ▶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본인 자구노력, 경기회복, 사회복지프로그램 확대, 취업알선 등의 순으로 응답

[단위:%]



### ■ 상환능력 유무에 대한 주관적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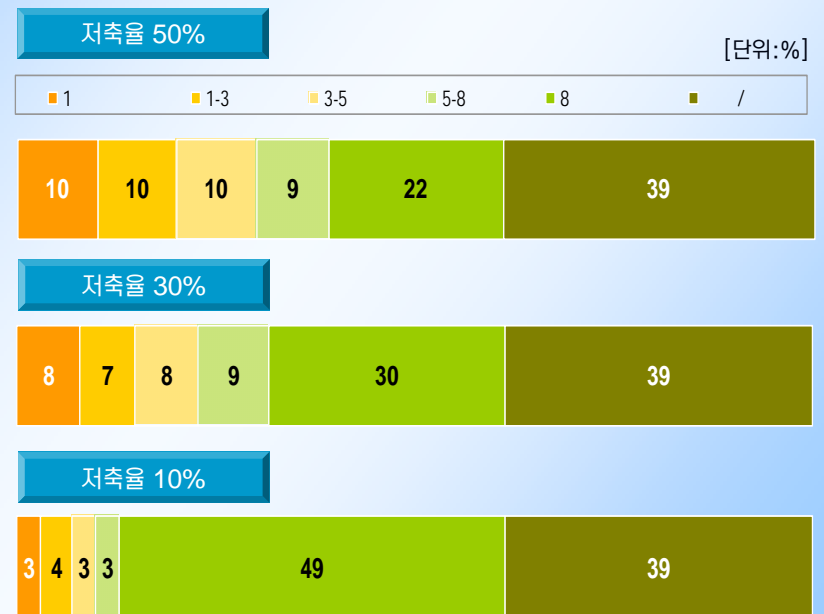
- ▶ 신용불량자중 19%만이 자력상환이 가능하다고 평가
- ▶ 63%는 채무재조정(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받아야만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
- ▶ 12%는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상환이 불가하다고 응답
- ▶ 4%는 무응답 또는 잘 모른다고 응답

### ■ 예상 상환 완료시점에 대한 주관적 판단

- ▶ 채무상환에 3년이상 소요 : 54%
- ▶ 1년이내 상환가능 : 18%
- ▶ 1년~3년 : 19%
- ▶ 무응답 또는 잘 모름 : 9%

### ■ 객관적 상환기간 추정 결과

- ▶ 총부채와 현재소득규모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 신용불량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예상 상환기간보다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 소득의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 1년이내(8%), 1~3년(7%), 3~5년(8%), 5~8년(9%), 8년이상(30%), 무응답(39%)으로 추정



정규직 이외 신용불량자의 생활비 조달

[단위:%]

전체 (N=1510)



신용불량자의 주거 형태

[단위:%]

전체 (N=1510)



채무상환 가능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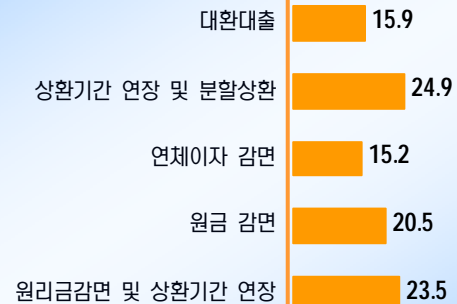
전체 (N=1510)



채무재조정 요구 유형

[단위:%]

전체 (N=1510)





### ■ 채권회수(추심) 방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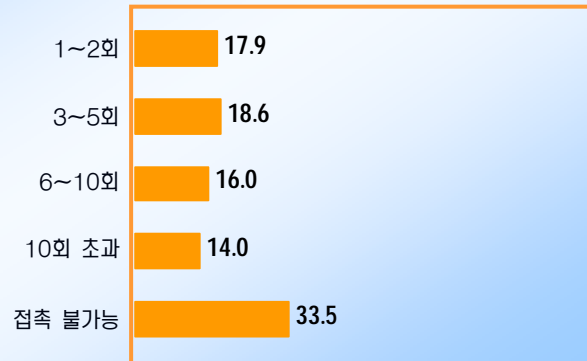
전체 (N=1510)



### ■ 신용불량자에 대한 접촉 가능성

[단위:%]

전체 (N=1510)



### ■ 신용불량자 도덕적 해이 형태

[단위:%]

전체 (N=1510)



### ■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에 대한 입장

[단위:%]

전체 (N=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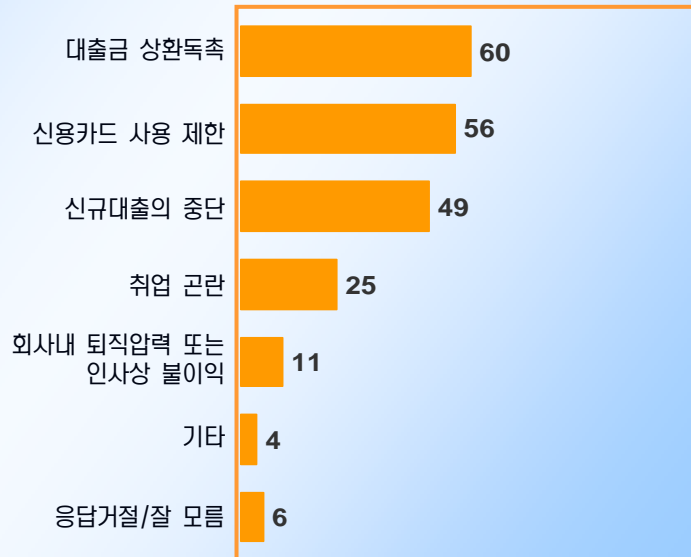


### ■ 신용불량자 고통·불이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 독촉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
- ▶ 카드사용 제한, 신규대출 곤란 등 금융거래 제한도 상당수 응답
- ▶ 취업 곤란, 인사상 불이익 등도 일부 경험

[복수응답, 단위:%]

전체 (N=3919)



### ■ 금융기관 직원 등을 통한 조사 결과

- ▶ 가압류, 상환독촉 등으로 인한 정상생활 곤란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
- ▶ 이혼, 가족과의 갈등도 상당수 차지
- ▶ 기타 실직, 취업곤란, 인사상 불이익 등의 순으로 파악하고 있음

[단위:%]

전체 (N=1510)



##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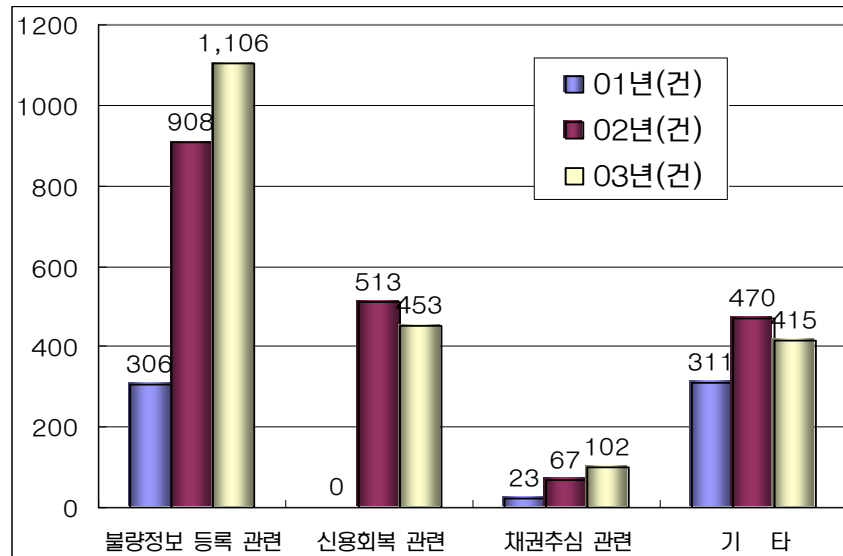
### ▶ 신용불량정보 등록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

- 대부분 불량정보 삭제 또는, 연체금 변제후에도 보존·관리되고 있는 불량정보 사후기록 삭제 등을 요청

### ▶ 신용회복지원 요청관련 민원도 상당수

-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자 범위 확대, 신청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을 주로 요구

### ▶ 최근들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부당추심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



(단위 : 건, %)

	01년	02년	03년
신용불량정보 등록 관련	306 (47.8)	908 (46.4)	1,106 (53.3)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관련	-	513 (26.2)	453 (21.8)
채권추심 관련 (부당행위 시정 요구)	23 (3.7)	67 (3.4)	102 (4.9)
기 타 (신용정보업 인허가, 정책제안등)	311 (48.5)	470 (24.0)	415 (20.0)
계	640 (100)	1,958 (100)	2,076 (100)

※ ( ) 는 비중

### 조사 결과

- 등록 당시보다 소득 대폭 감소
- 자영업 급감, 임시직 및 무직자 급증 등 직업 안정성 악화

-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가 가장 많음

-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상당수

- 연체금 상환을 위해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채무자가 상당수

### 시 사 점

- 신용불량자들의 소득기반 취약
- 자영업자의 사업실패 증가

- 카드사 가게신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신용불량자 급증의 주요한 원인

- 채무규모가 비교적 크고, 구제가 어려운 계층도 존재

-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사람이 다수
- 거래금융기관에서 사태악화이전에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대 응 방 향

- 경기 활성화
- 취업알선 등 일자리 제공

- 만기연장 등 가게대출 연착륙 유도

-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되, 변제불가시 법원절차 활용

- 한계채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용불량자화를 최소화

### 조사 결과

- 채무재조정 받으면 상환가능
  - 신용불량자중 61% 응답
  - 금융기관직원 33% 응답
- 자력상환 가능
  - 신용불량자중 19% 응답
  - 금융기관직원 35% 응답

- 신용불량자 부채 및 소득 분석결과,
  - 채무상환에 8년 이내 소요 : 52%
  - 8년 이상 소요 : 48%

-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으면서 직장 및 가정생활에 어려움

- 금융기관 직원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인식
  - 이에 따라,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6%
  - \* 신용불량자중 연락 불가능 : 34%

### 시 사 점

-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노력 미흡 반영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존재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 다수로부터 추심을 받음에 따라 채무자의 추심압박 고통 심화
- 개별 추심에 따른 추심비용 과다

- 현행 신용불량자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폐지는 신중히 결정

### 대 응 방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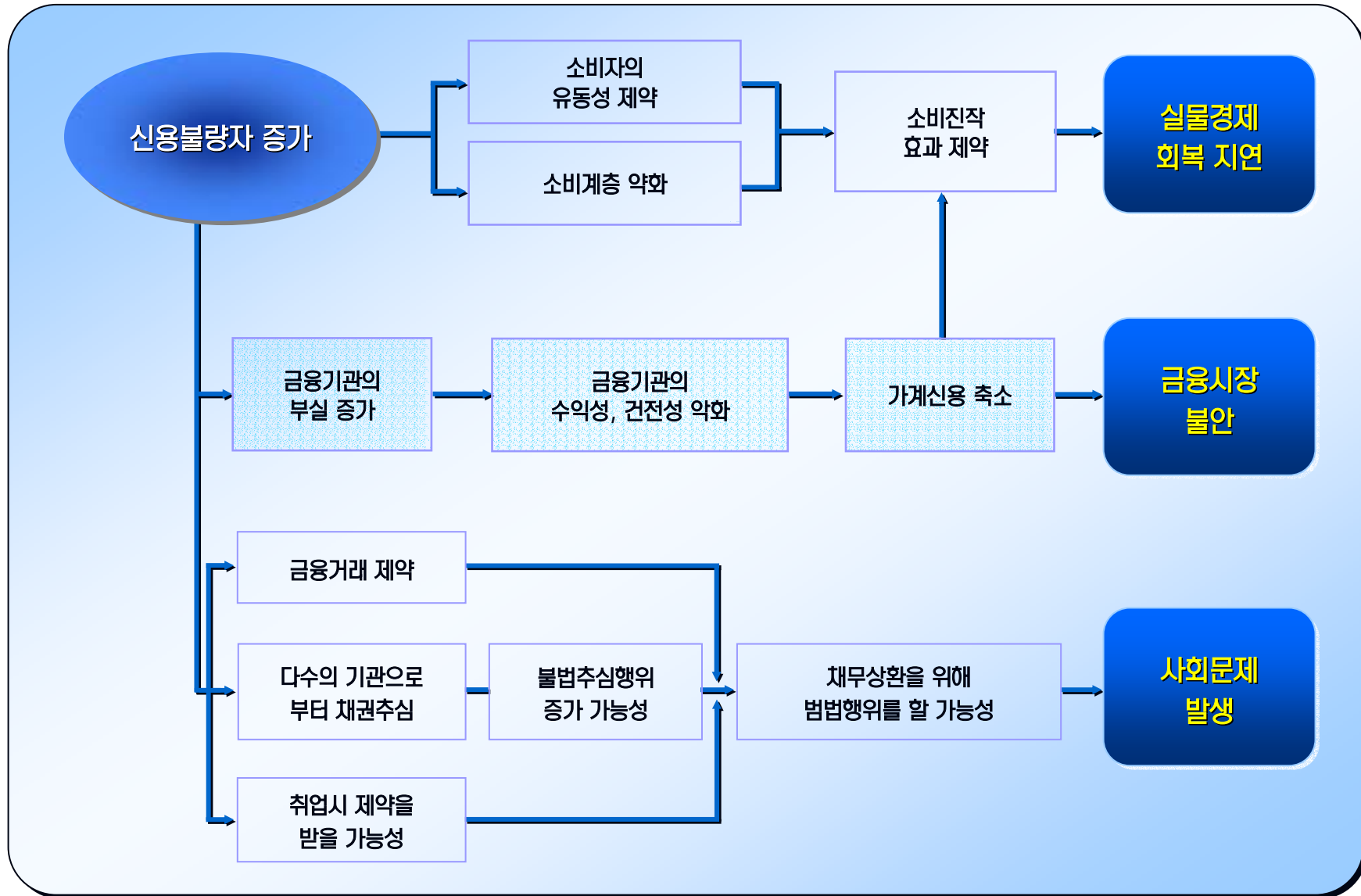
- 신용회복 기회를 충분히 제공
- 채무상환 내역정보관리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

-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확충

-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해 금융권 공동으로 추심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 채무자 도덕적 해이, 금융권 연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제도 폐지시기 결정

## (참고) 신용불량자 문제의 파급경로





### **III.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향**

#### **1. 기본방향**

#### **2. 대응방향**

- 2.1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 최소화**
- 2.2 기 발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회 확충**
- 2.3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
- 2.4 추심부담 완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2.5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 제고**
- 2.6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기회복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

▶ 그러나, 경기회복을 통한 해결에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도 적극 대응

■ 은행을 중심으로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을 최소화

■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

▶ 1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단기 소액 신용불량자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연장,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 해소를 추진

▶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

■ 이상의 방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채무상환능력 상실 등)에는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이 불가피하므로 법적 절차(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만 처리

■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강화하되,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는 일정기간 경과후 추가 금리인하 및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이행자는 보다 엄격하게 신용정보 등을 관리



#### 신용불량자 되기 이전의 한계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 단기 소액의 연체자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사전에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유도

- 각 금융기관별로 채무상환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만기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여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 억제

※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체 심사기구 등을 통해 Review하는 절차를 운용토록 지도

#### 가계대출의 연착륙 유도

▶ 가계상환부담을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경상성장을 범위내, 8%대)에서 증가하도록 유도

-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은행 가계대출(03년 82조원 → 04년 92조원)이 원활하게 만기연장되도록 유도

- 각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선제적·경쟁적으로 회수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지도·점검

- 주택금융공사(3.2일 출범)를 통하여 3년만기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

\* 주택대출(145조원)중 3년만기이하 일시상환 비중이 69%(03.9말)

■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137만명) →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노력 강화

※ 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중 1,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105만명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 ▶ 금융기관별로 자체 보유한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환의지가 있는 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강화
  - 만기연장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 거치를 하는 등 채무자의 신용회복기회 부여
  - 고의적인 상환기피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향후 신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제외
  - 감독당국이 금융기관별 자체보유 신용불량자 축소대책 및 실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각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 다중 신용불량자(235만명) → 개인워크아웃,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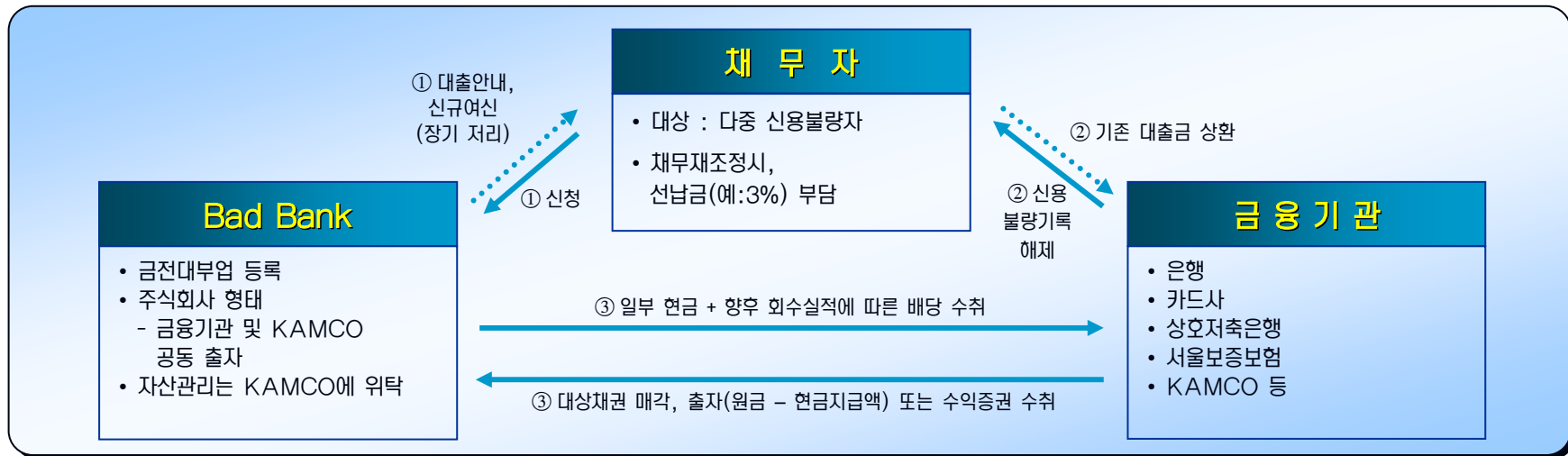
- 02.10월부터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 지원
  - 04.2월말 현재까지 상담 31만명, 신청 91,904명(워크아웃진행자 49,400명)
  - ▶ 활성화 방안(→금년중 신용불량자 20만명 감축 목표)
    - 참여금융기관(현재 188개) 지속 확대
    - 지방사무소 추가 설치(현재 부산,대구,대전,울산,제주 설치·운영중)
    - 채무상환 이행실적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 ※ (예시) 일정기간 동안(예 : 2년 또는 3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및 원리금 부분 감면 지원하는 방안 검토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 ▶ 10개 금융기관 참여(은행 5, 카드사 5)하에 85만명에 대한 채무를 집중하여  
공동추심 또는 채무재조정 진행중
  - 04.2월말까지 36,650명이 채무재조정 신청
- ▶ 성실 이행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금년중 10만명 채무재조정 목표

■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전문 취급하는 Bad Bank 설립 추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자 : 일정기간(예 : 3개월, 6개월) 연체, 5천만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li> <li>② Bad Bank는 KAMCO,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고, 대부업자로 등록</li> <li>③ Bad Bank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여 대상채무자를 확정</li> <li>④ Bad Bank는 대상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장기 저리로(최장 8년) 신규 여신을 지원<br/>※ 원금의 일정부분(예 : 3%)은 채무자가 우선 상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채무자는 Bad Bank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 신용불량자에서 해제)</li> <li>⑥ 채무자는 Bad Bank 차입금을 최장 8년간 분할상환<br/>※ 성실 이행자에 대한 추가감면, 초기 유동성 부족자를 위한 상환 거치기간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li> <li>⑦ Bad Bank 보유 정보는 CB에 제공하여 활용</li> </ul> |
|--|---|



■ Bad Bank는 신규대출을 통해 기 발생한 신용불량자를 대량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가능

- ▶ 금융기관과의 사전협약을 통해 대상 채무자를 사전에 확정하고, 대상 채무자가 신청하면 즉시 채무 재조정 가능
- ▶ 신규대출시 채무자로부터 일정부분을 선납금(예 : 원금의 3%)으로 받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금융기관 채무를 장기간 분할상환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요건 등을 심사하고 채무재조정 여부를 결정
- ▶ Bad Bank에 비해 대상 채무금액이 상대적으로 큼

	신용회복위원회	Bad Bank(안)
대상자	다중 신용불량자	다중 신용불량자
대상요건	3억이하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있는자(소득증빙 필요)	채무상환 의사가 있는 채무자로서, 5천만원 미만 채무자는 소득증빙 없이 가능 다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선납(예 : 원금의 3%)
참여금융기관	04.2월말 현재 188개	주요 대형금융기관 중심으로 참여
신속성 여부	변제계획안에 대한 금융기관 동의 필요 (채권액 기준 : 무담보 1/2, 담보 2/3)	금융기관 사전협약에 따라 사후동의절차 없이 대상채무자가 신청하면 즉시 채무재조정 가능
존속기간	상설적 기구	한시적 운용(3개월 또는 6개월만 채무조정신청을 받음)

- 민간차원의 사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처리
  - ▶ 파산시보다 장기(최장 8년)분할 상환금이 많을 경우 → 개인회생제도
  - ▶ 변제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 개인파산제도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 ▶ 04.3.2일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공포후 6월)
  - 파산선고없이 장래 수입으로 최장 8년동안 채무를 분할상환
  - 변제계획 완료시, 잔여 채무는 면책
    - \*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제도를 운영중(미국, 02년중 45만명이 개인회생제도 이용)
- ▶ 개인회생제도 남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파산시 변제액 < 회생제도에 의한 변제액]인 경우에 신청 가능
  -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채무상황에 사용
  - 재산은닉 등의 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개인회생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CB에 제공

※ 개인회생제도는 잔여채무가 면책되는 준 파산제도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합의에 해결되는 것보다 당사자의 신용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 ▶ 변제능력 상실자는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유도
  - \* 파산자의 경우, 공무원 임용 불가·파산사실의 신원증명서 기재 등 제한을 받으나,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새출발 가능
  - \* 파산결정(02년) : 미국 110만명, 일본 21만명

각 금융기관별로  
일자리와 연계한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 ▶ 20~3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이 자체 또는 거래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
- ▶ 각 금융기관별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분위기 확산

신용회복위원회  
취업 알선기능 강화

- ▶ 신용회복위원회내 취업안내센터 운영을 활성화  
  
※ 03.12월~04.2월중 구직신청 235명, 취업 36명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신용불량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원보증서 발급

소액 신용불량자  
취업제약요인 해소  
(CB사 협의 의견)

- ▶ 청년층이 소액 연체로 인해 취업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 신용정보업자가 고용목적의 신용정보를 제공할시,  
소액(예:100만원 또는 200만원 미만) 신용불량정보의 제공을 한시적으로 유예

추심 부담  
완화

- ▶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Bad Bank 등을 통해 금융권 공동으로 추심을 전개함으로써 다중채무자의 추심압박 부담을 완화
- ▶ 채권추심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임직원 제재 규정 마련
- ▶ 금감원에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 신고센터 설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채무상환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빌린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규율을 확고히 정립하여 도덕적 해이를 차단
  -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채무상환의지 정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개인별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각 금융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에서 수집·관리하고, 개인신용평가에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책임 이행 정도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제재를 차별화
    - 1) 정상 상환, 채무재조정에 의한 경감, 법원에 의한 일부 면책, 파산에 따른 면책 등의 정보
  - 교과서에 금융소비자관련 내용 반영 등 신용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현 황

- ▶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중
- ▶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
  - \* 담보대출 관행에 익숙하여 개인신용평가에 기초한 금리차등·대출한도차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및 활용 미흡

## 제고 방안

- ▶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체 개인신용평가모델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제고
- ▶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활성화
  - 고용관련 정보(근로복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
- ※ 02년부터 국내 개인신용평가회사(2개사)가 약 1,000만건(계좌기준) 이상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개인신용평점 서비스 등을 제공중

## 목 표

-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 및 한도·금리 등 금융거래 조건이 차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 ※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보유한 대형금융기관 :  
자체 신용평가모델 + CB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금융거래 여부 및 금리·한도 등을 결정
- ※ 자체 모델 개발이 어려운 소형금융기관 : CB를 적극 활용하여 신용평가능력 보완

## 문 제 점

- ▶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금융권의 단순 신용정보에 불과한 개념이 공인된 '불량경제주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활용되는 문제
  - 금융거래 여부 및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활용
  - 소액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

## 개편 방안 (금융회사 협의 의견)

- ▶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채납자 등은 신용불량자에서 제외
  - ※ 금융권 연체없이 국세 등 세금채납만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14.5만명(03.12말)
- ▶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기록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만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지 기초자료로 활용
  - 이를 통해 연체금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와 동일하게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해소
- ▶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 개인신용정보공유 확대, CB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신용에 따른 합리적인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
  - 개편시기는 금융기관 연체율 추이, 도덕적 해이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
  - ※ 상당수가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신용사면,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제도폐지시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